

경실련도시개혁센터 & 한국도시행정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균형발전과 공익 관점에서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

2021.12.21

[화]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한국도시행정학회

CONTENTS

균형발전과 공익 관점에서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

개회

개회사 : 채원호 한국도시행정학회 신임회장
축사 : 최봉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직전이사장

발제

1.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
2. 공익과 공공의 역할
- 한상훈 (중원대 교수)
3. 현행 공공주도 주택공급 필요성과 추진현황
- 최상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4. 공공주도 주택공급 의사결정에서의 도시행정 문제와 시민감시
- 백인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토론

좌장 : 류중석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고문, 중앙대 교수)
황지욱 (전북대 교수)
최정석 (중부대 교수)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

폐회

폐회사 : 김근영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2021. 12. 21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목 차

1. 국토균형발전의 개념과 필요성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요인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국토균형발전의 개념과 필요성

1. 국가균형발전의 개념과 필요성

국가균형발전 vs. 국토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이란 ?
 - 정치적 권력의 균형 → 삼권의 분립 등
 - 경제적 균형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균형, 소득 및 자산소유의 균형 등
 - 사회적 균형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정책 등
 - 공간적 균형 → 국토공간상 인구 및 산업분포, 지역간 주민 삶의 질 균형(국토균형발전)
- 국토균형발전 개념
 - 균등 (equality) vs. 균형(balance 또는 equilibrium)
 - 지역균형발전(均衡發展) 또는 국토균형발전, 균형개발, 지역균형개발, 국토균형개발은 각 지역이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의미(위키백과)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균형발전위원회 또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로 개칭이 필요

1. 국가균형발전의 개념과 필요성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

-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위험의 분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의 구현
 -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격언처럼 자연 및 인공적 재해에 대비한 공간적 분산(국토균형발전)이 필요
- 둘째, 헌법정신의 구현(평등권의 구현)
 - 납세의무를 지는 국민이 국토의 어디에 살든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평등권의 구현)
 - 헌법 123조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셋째, 국가(국민)공동체의 통합
 - 국토불균형은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 사회적 형평성 저해, 지역갈등을 야기,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저해
- 넷째, 국가 경쟁력 확보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추구
 -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 1인당 GRDP와 토지1억원당 생산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1. 국가균형발전의 개념과 필요성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1인당 GRDP변화 및 토지1억원당 GRDP변화

| 구분 | 1인당 GRDP(단위 : 만원) | | | | | | | 토지1억원당GRDP (단위 : 만원) | | | | |
|---------|-------------------|---------|---------|---------|---------|---------|---------|----------------------|---------|---------|---------|---------|
|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5 | 2018 | 2000 | 2005 | 2010 | 2015 | 2018 |
| 전국 | 473.6 | 999.0 | 1,426.3 | 2,038.6 | 2,766.0 | 3,252.1 | 3,680.1 | 4,726.2 | 3,994.6 | 3,416.9 | 3,833.8 | 3,728.0 |
| 수도권(A) | 523.9 | 1,062.4 | 1,493.1 | 2,079.3 | 2,792.4 | 3,293.1 | 3,829.3 | 4,238.3 | 3,079.8 | 2,454.4 | 2,977.6 | 3,071.4 |
| 비수도권(B) | 436.0 | 946.7 | 1,368.9 | 2,000.8 | 2,740.9 | 3,212.0 | 3,532.1 | 5,302.1 | 5,516.7 | 5,335.1 | 5,390.8 | 4,841.1 |
| A/B | 1.20 | 1.12 | 1.09 | 1.04 | 1.02 | 1.03 | 1.08 | 0.80 | 0.56 | 0.46 | 0.55 | 0.63 |

자료 : GRDP : 통계청, 지역소득, 해당년도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인구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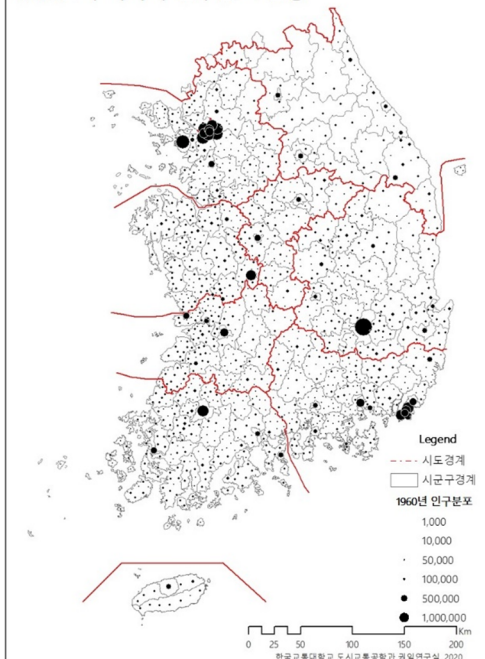
지가 : 해당년도 공시지가 총액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현상과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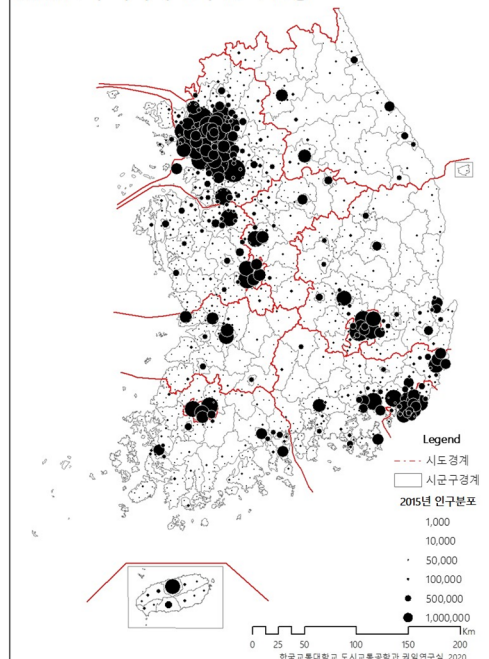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상과 요인

인구분포 현황

1960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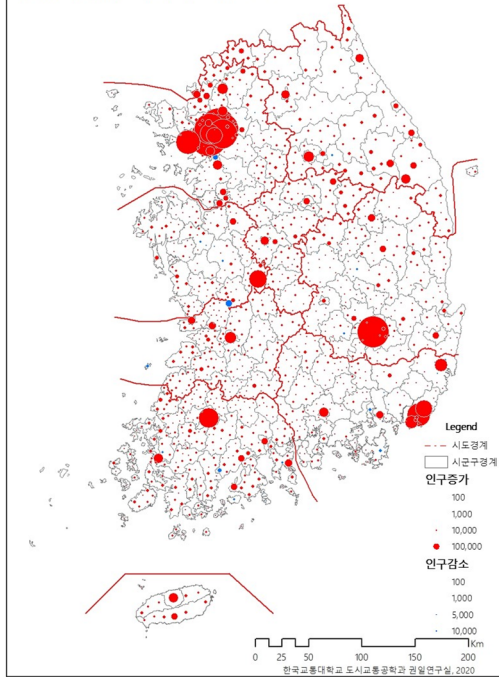
2015년 우리나라 인구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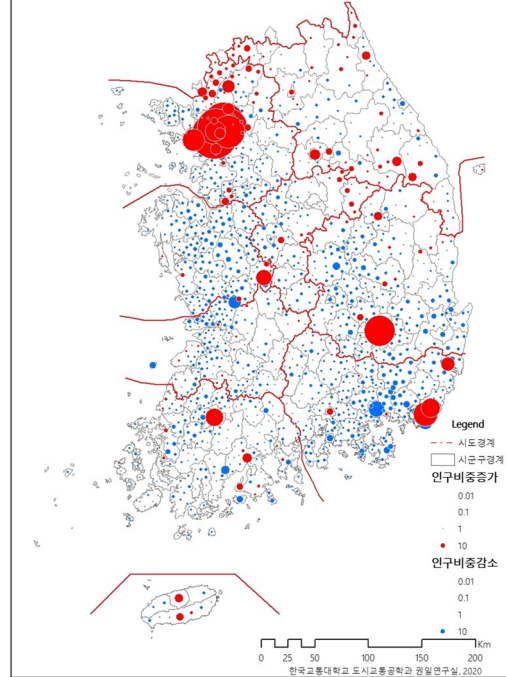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상과 요인

인구변화 분포 현황

1960-1966년 인구변화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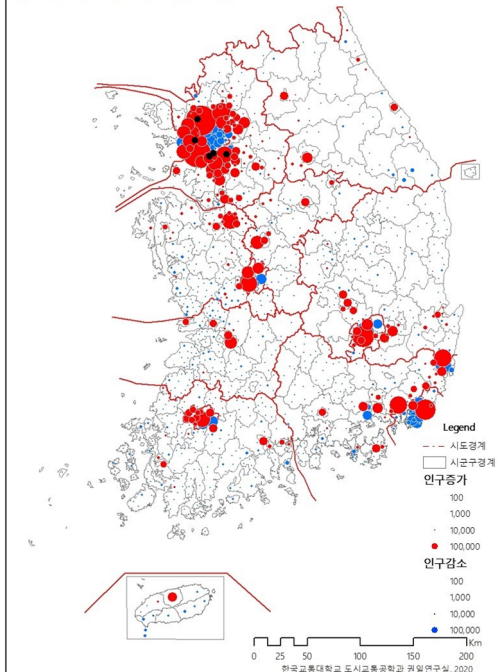
1960-1966년 인구비중변화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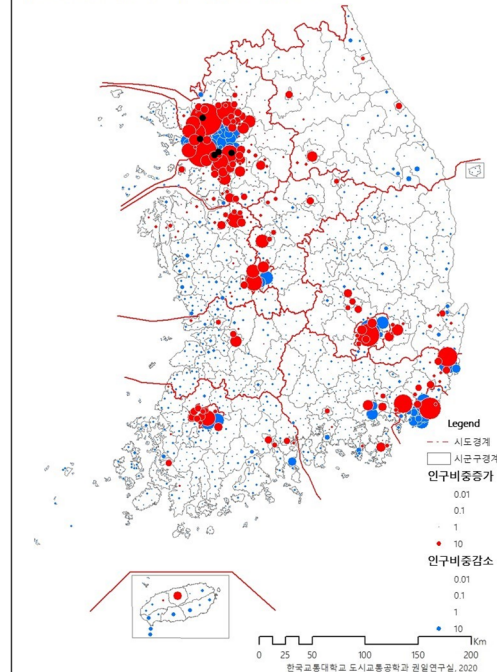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상과 요인

인구변화 분포 현황

1995-2000년 인구변화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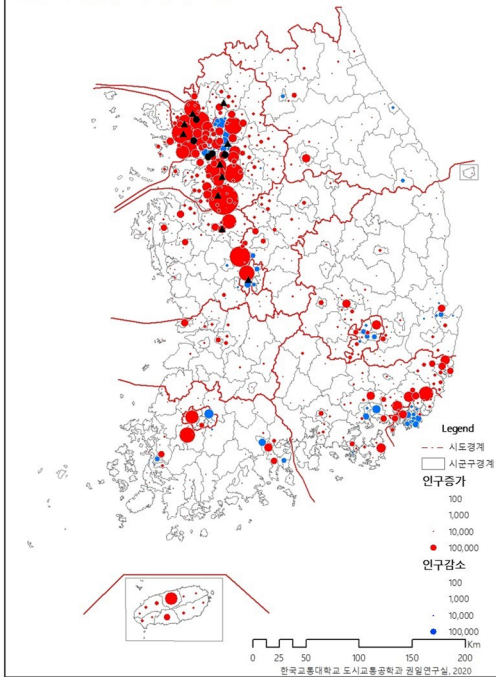
1995-2000년 인구비중변화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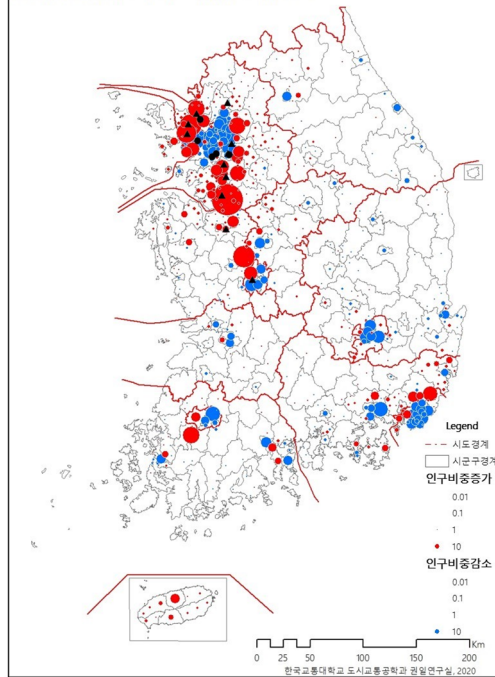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상과 요인

인구변화 분포 현황

2010-2015년 인구변화분포



2010-2015년 인구비중변화분포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상과 요인

국토불균형 현황과 현안

- 국토공간상 인구분포의 불균형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불균형문제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분포 양극화로 인한 지방소멸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 남북교류에 대비한 국토·도시분야의 준비
 - 통일 및 남북교류에 대비한 남북상생 국토비전과 기반구축 필요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상과 요인

수도권 · 비수도권 불균형

- 대도시 인구억제 대책(1964), 수도권인구집중억제방안(1969) 등을 시작으로 수도권 집중 방지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

| 구분 | 1960 | 1966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5 | 2020 | |
|----------------------------|-------|------------------|------------------|------------------|------------------|------------------|------------------|------------------|------------------|------------------|------------------|------------------|------------------|------------------|
| 행정 구역 (km ²) | 전국 | 98,567 | 98,567 | 98,623 | 98,623 | 98,623 | 98,807 | 99,261 | 99,372 | 99,372 | 99,646 | 100,033 | 100,378 | |
| | 수도권 | 11,519 (11.7) | 11,519 (11.7) | 11,553 (11.7) | 11,556 (11.7) | 11,556 (11.7) | 11,586 (11.7) | 11,633 (11.7) | 11,640 (11.7) | 11,640 (11.7) | 11,730 (11.8) | 11,801 (11.8) | 11,830 (11.8) | 11,856 (11.8) |
| 인구 (천인) | 전국 | 24,989 | 29,182 | 31,466 | 34,705 | 37,436 | 40,532 | 43,411 | 44,609 | 46,136 | 47,279 | 48,580 | 51,069 | 51,829 |
| | 수도권 | 5,194 (20.8) | 6,913 (23.7) | 8,791 (27.9) | 10,929 (31.5) | 13,298 (35.5) | 15,864 (39.2) | 18,587 (42.8) | 20,189 (45.3) | 21,354 (46.3) | 22,767 (48.1) | 23,836 (49.1) | 25,274 (49.5) | 26,043 (50.2) |
| | 비 수도권 | 19,795 | 22,269 | 22,675 | 23,775 | 24,138 | 24,638 | 24,824 | 24,420 | 24,782 | 24,512 | 24,744 | 25,795 | 25,786 |
| 인구 밀도 (인/km ²) | 전국 | 253.5 | 296.1 | 319.1 | 351.9 | 379.6 | 410.2 | 437.3 | 448.9 | 464.3 | 474.5 | 485.6 | 509.2 | 516.3 |
| | 수도권 | 450.1 | 600.1 | 760.9 | 945.8 | 1,150.8 | 1,371.9 | 1,597.8 | 1,734.5 | 1,834.6 | 1,940.8 | 2,019.8 | 2,136.4 | 2,196.6 |
| | 비 수도권 | 227.4 | 255.8 | 260.4 | 273.1 | 277.2 | 282.5 | 283.3 | 278.3 | 282.5 | 278.8 | 280.4 | 291.6 | 291.3 |

자료 : 인구, 행정구역면적의 1960-2000은 권일(2007. 12)을 재인용.
2005~2018 행정구역면적 :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 요람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상과 요인

수도권 신도시 그리고 국토불균형

- 국토불균형은 인구이동에 대한 결과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이동 결과, 수도권의 주택부족, 주택가격상승, 수도권 신도시건설 등 주택공급으로 이어짐.
 - 수도권 신도시가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켰다”는 주장과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대규모 인구유입을 촉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음.
 - 후자 주장은 신도시 거주민 중 비수도권에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이 낮다 (전체의 약 5%미만) 것이며, 전자의 경우 수도권 신도시는 수도권내 인구를 흡인하였고, 신도시로 빠져나간 빈자리를 비수도권에 서 유입된 인구가 채워진(filtering효과) 것으로 판단하는 것임.
 - 수요가 없는 지역에 주택이 공급된다고 인구가 유입되지는 않을 것임. 따라서 수도권 주택공급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음
- 1, 2기 신도시 입주 중에 수도권의 인구는 증가하고 비수도권 인구는 감소하였음.
-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수도권의 주택부족 등으로 인한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응하여 신도시건설 등 주택공급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임. →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방지과 나아가 인구유입 방안마련이 필요함.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상과 요인

수도권 1, 2기 신도시 개요, 1기신도시별 개요

| 구분 | 1기 신도시 | 2기 신도시 |
|------|---|--|
|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 내집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 거점 조성 및 난개발 방지 |
| 건설시기 | 1990년대 | 2000년대 |
| 도시규모 | 대규모 (평균 3,033ha) | 중대규모 (평균 1,263ha) |
| 광역체계 | 기능분산형(베드타운) | 거점육성형(자족도시) |

자료 : 한국토지주택연구원(2020), 「3기 신도시 개발전략 및 계획기준 수립 연구」 중에서

| 구분 |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
|---------------------|---|--|---------------------|---|---|
| 개발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의 중심업무 상업지역 □자족적인 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 문화시설이 완비된 전원도시 □서울 서부중심도시 □남북통일 전진기지 | □안양시의 신중심업무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포시의 신중심업무지역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전원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천시의 신중심업무지역 □서울-인천간 공업지역 중심의 근교거주지 |
| 계획인구(인) (세대수(호)) | 390,000 (97,580) | 276,000 (69,000) | 168,188 (42,047) | 165,588 (41,397) | 170,000 (42,500) |
| 개발기간(년) | '89.8-'96.12 | '90.3-'96.12 | '89.8-'95.1 | '89.8-'95.1 | '90.2-'96.1 |
| 최초분양/입주 | '89.11/'91.09 | '90.10/'92.08 | '90.05/'92.03 | '90.06/'92.04 | '90.10/'93.02 |

자료 : 한국토지공사, 분당신도시개발사, 1997.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15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상과 요인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 구분 | 인구(단위: 만명) | | | 가구(단위: 만가구) | | | 가구당 인구 | |
|-------|------------|--------|--------|-------------|-------|-------|--------|------|
| | 수도권 | 비수도권 | 전국 | 수도권 | 비수도권 | 전국 | 수도권 | 비수도권 |
| 80~85 | 252.2 | 49.0 | 301.2 | 90.8 | 69.5 | 160.3 | -0.4 | -0.5 |
| 85~90 | 276.6 | 19.6 | 296.2 | 108.9 | 69.0 | 177.9 | -0.4 | -0.4 |
| 90~95 | 160.3 | -40.5 | 119.8 | 88.0 | 73.5 | 161.4 | -0.3 | -0.5 |
| 95~00 | 116.5 | 36.2 | 152.7 | 74.4 | 65.8 | 140.2 | -0.2 | -0.2 |
| 00~05 | 141.2 | -27.0 | 114.3 | 97.7 | 61.8 | 159.5 | -0.2 | -0.3 |
| 05~10 | 106.9 | 23.2 | 130.1 | 88.2 | 69.9 | 158.2 | -0.2 | -0.2 |
| 10~15 | 143.8 | 105.2 | 248.9 | 110.6 | 88.5 | 199.1 | -0.2 | -0.1 |
| 15~19 | 61.9 | 9.1 | 71.0 | 77.3 | 55.7 | 133.0 | -0.1 | -0.1 |
| 19~20 | 6.5 | -6.4 | 0.2 | -37.8 | -14.7 | -52.5 | 0.1 | 0.0 |
| 20~25 | 34.4 | -21.9 | 12.5 | 59.4 | 39.8 | 99.3 | -0.1 | -0.1 |
| 25~30 | 17.9 | -15.7 | 2.2 | 40.1 | 29.3 | 69.4 | -0.1 | -0.1 |
| 30~35 | -3.4 | -26.4 | -29.7 | 25.6 | 20.4 | 46.1 | -0.1 | -0.1 |
| 35~40 | -29.7 | -47.8 | -77.5 | 10.2 | 5.2 | 15.4 | 0.0 | -0.1 |
| 40~45 | -58.1 | -70.09 | -128.1 | -7.5 | -11.9 | -19.5 | 0.0 | 0.0 |
| 45~47 | -31.5 | -34.9 | -66.3 | -7.4 | -7.9 | -15.3 | 0.0 | 0.0 |

자료 : 1980~2019 통계청 인구센서스, 각년도, 2020~2047:통계청 추계인구, 2017

16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상과 요인

인구이동과 토다로 이론

- 토다로(todaro)이론 :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요인이 현존하는 도농간의 절대 소득의 격차 때문이 아니라 장래 기대되는 임금격차 때문이라고 주장
- 토다로의 역설 : 도시에서 실업감소를 위한 정책은 오히려 더 많은 실업을 야기시킴 →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농촌문제의 해결 없이는 도시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내포

▪ 토다로 모형(인구이동)

$$M = f(Y^e_u - Y_r)$$

$$Y^e_u = p \cdot Y_u$$

$$p = b \cdot E / (N-E)$$

$$M = f(b \cdot E / (N-E) \cdot Y_u - Y_r)$$

-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을 설명해 주는 변수가 두 가지 나오는데, 첫째, 도시와 농촌간 소득차이 둘째, 도시에서의 취업기회 두가지임.
- 이 두 변수와 가정된 모형에 입각하여 도시로의 이동문제를 풀어보면, 농촌에서의 평균소득은 기대 순 실질소득이며, 도시에서의 소득은 도시에서의 소득에 취업기회를 곱한 값임. 즉 농촌보다 도시의 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이주자가 판단하기에 취직을 고려한 실질적인 소득이 높지 않다며 이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는 이유는 이주자가 판단하기에 이주를 하기 전의 평균소득보다 더 높은 소득을 안겨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행동임

- 여기에서 도시와 농촌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수정하면, 그대로 적용됨. 즉, **비수도권에 대한 인구유출문제 해결 없이는 수도권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상과 요인

박정희 정부에서 파악한 국토불균형 요인

박정희는 그러나 그해 3월7일 다시 한번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박정희는 이미 10여차례 서울시 건설부 경제기획원 등에 수도권 인구문제의 해결을 지시한 바 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1976년 무임소장관실에 아예 이 문제를 전담할 기구(수도권인구정책실)

를 별도로 설치했다. 그리고는 재무부 이재국장 출신의 박봉환을 실장으로 임명하여 이 문제를 다루게 했다.

박실장은 1년여에 걸친 작업결과, 각종 영역에서의 건의, 외국의 사례와 그에서 얻은 교훈 등을 참조하여

‘수도권인구재배치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전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다. 이날 박실장의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인구집중의 근본 원인은 첫째,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둘째, 제조업의 과도한 서울집중(당시 제조업 종업원의 27%가 서울에 편중돼 있었다)

셋째, 교육기관의 서울 집중 넷째, ‘사람은 나면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라는 국민들의 뿌리깊은 의식구조 등에 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면대책으로 ▷반월공단을 조성해서 서울에 있는 제조업 공장들을 그곳으로 이전하고, 중장기대책으로는 ▷지방 5대 거점도시의 중점개발이 필요하다. 서울 외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거점도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당시까지 1군(郡)

1공장식의 획일적인 새마을 공장 정책의 실패사례를 반성하고 공업용수나 배후여건을 고려하여 인구 30만 이상 거점이 될 만한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장을 건설해 수도권집중의 요인을 흡수해야 한다.”

출처: [발굴특종]박정희 사후 20년만에 공개 - 국토개조계획 (joongang.co.kr) 중에서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상과 요인

국토불균형현상과 요인

- 인구분포로 본 국토불균형 현상: 사람, 산업의 창업 및 이전, 공간의 질(가치)
 - 지역간 인구이동이 누적된 현상
 - 산업체 등 기업의 이동 및 창업집중
 - 인프라의 공급에 따른 공간가치의 상승
- 인구이동, 기업의 창업 위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불균형 심화 요인)
 - 첫째, in서울 대학중심의 재정지원(2000년대 들어 강화됨.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에 지원 강화가 필요)
 - 둘째, 기업 등 일자리의 집중(양질의 노동력이 있는 공간에 가까이 가려는 특성)
 - 셋째, 공간의 질(인프라의 투자에 따른 공간의 접근성 등 가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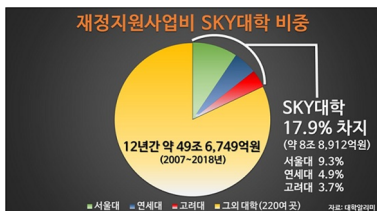
학생 1인당 투자되는 교육비가 서울대는 4,475만원, 연세대는 3,173만원 수준이지만, 국립대 중 가장 많은 교육비를 투입하는 부산대는 1,822만원에 불과하다.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9개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국·공립대학(39개대)의 1.6~1.9배 수준으로 교육비 격차가 벌어져 있다. 출처: 에듀프레스(미자연 대선 교육의제 20 지역대학 투자와 지역국립대 무상화 (<http://www.edupress.kr>) (2021.12.8)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상과 요인

서울소재 대학의 재정지원사업비 집중

서울대 연 평균 지원금은 '비 스카이대'의 20배

지난 12년 간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대학에 지원한 재정지원사업비 총 49조6749억 원 가운데 서울대에 지원된 금액은 4조6175억 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서울대 재학생 수는 2만8천여 명으로 조사 대상 전국 4년제 대학의 전체 학생 수 194만여 명 중 1.4%에 불과하다. 또 연세대에 지원된 금액은 2조4479억 원으로 전체의 4.9%, 고려대는 1조8258억 원으로 전체 3.7%를 차지했다. 스카이 세 대학의 재정지원사업비 총합은 8조8912억 원으로 전체의 17.9%에 달했다. 조사 대상인 전체 대학의 재학생 수 194만 명 중 5% 정도(성교 포함)만을 차지하는 세 대학이 전체 사업비의 1/5 가까이를 가져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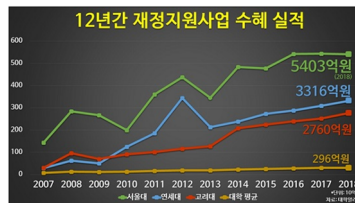
▲ 2007년~2018년 대학재정지원사업비 간헐 지원금 중 스카이 대학 비중. 세 대학에 대한 지원금도 17.9%로 1/5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 임영환

매년도 대학별 평균 재정지원비를 살펴보면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서울대는 매년 평균 384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고, 연세대는 2040억 원, 고려대는 1522억 원을 각각 지원 받았다. 반면 세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매년 평균 193억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서울대는 전국 대학 평균의 20배 가까이, 연세대-고려대는 7~10배를 지원 받은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스카이 대학과 나머지 대학의 재정지원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7년 전국 대학재정지원사업비 1조4000억 원 가운데 서울대는 1428억 원, 연세대는 291억 원, 고려대는 295억 원을 지원 받았고, 전국 대학은 평균 80억 원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2018년에는 총 사업비 6조6000억 원 가운데 서울대가 5403억 원, 연세대 3316억 원, 고려대 2760억 원을 받은 반면, 전국 대학 평균은 296억 원이었다. 서울대 지원비가 약 4000억 원, 연세대가 약 3000억 원, 고려대가 약 2500억 원 상승하는 동안 나머지 대학은 평균 216억 원이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다.

지원 받았다. 반면 세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매년 평균 193억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서울대는 전국 대학 평균의 20배 가까이, 연세대-고려대는 7~10배를 지원 받은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스카이 대학과 나머지 대학의 재정지원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7년 전국 대학재정지원사업비 1조4000억 원 가운데 서울대는 1428억 원, 연세대는 291억 원, 고려대는 295억 원을 지원 받았고, 전국 대학은 평균 80억 원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2018년에는 총 사업비 6조6000억 원 가운데 서울대가 5403억 원, 연세대 3316억 원, 고려대 2760억 원을 받은 반면, 전국 대학 평균은 296억 원이었다. 서울대 지원비가 약 4000억 원, 연세대가 약 3000억 원, 고려대가 약 2500억 원 상승하는 동안 나머지 대학은 평균 216억 원이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다.



▲ 2007~2018년 스카이 대학과 전국 대학 220여 곳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혜 추이. 스카이 대학의 지원금은 가파르게 늘었지만, 전국 대학의 평균 지원금은 큰 변화가 없다. © 임영환

그러다 보니 2018년 하위 132개 대학의 지원비를 모두 합친 금액은 5451억 원으로 서울대 한 곳의 지원비(5403억 원)와 비슷했다. 재정지원 금액이 적은 대학은 대부분 사립대였고 교육여건성과 등을 측정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재정지원제한에 걸리거나 재정지원사업을 적게 수행한 경우였다. 가장 지원금이 적은 대학은 전년 한려대 7천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매우 불평등한' 재정지원이 대학 서열 고착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2017년 전국 일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사업 배분의 공평성을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가 0.67~0.72에 달해 매우 불평등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니계수는 분포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한 계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자료출처 : 단비뉴스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no=13150>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상과 요인

지역별 재정지원사업비(2020년 현황)

| 지역 | 대학수 | | 수혜건수 | | 총금액 | |
|------|-----|-------|-----------------|-------|---------------------|-------|
| | 개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금액(억원) | 비율 |
| 서울 | 51 | 23.6 | 23,587 (462) | 37.2 | 31,602.3 (619.7) | 37.3 |
| 경기인천 | 33 | 15.3 | 6,542 (198) | 10.3 | 8,274.1 (250.7) | 9.8 |
| 강원 | 11 | 5.1 | 2,726 (248) | 4.3 | 3,078.9 (279.9) | 3.6 |
| 대전충남 | 29 | 13.4 | 7,158 (247) | 11.3 | 10,245.1 (353.3) | 12.1 |
| 충북 | 12 | 5.6 | 2,049 (171) | 3.2 | 3,106.4 (258.9) | 3.7 |
| 대구경북 | 21 | 9.7 | 6,382 (304) | 10.1 | 8,175.6 (389.3) | 9.6 |
| 부울경 | 28 | 13.0 | 8,152 (291) | 12.8 | 10,677.3 (381.3) | 12.6 |
| 광주전남 | 19 | 8.8 | 3,436 (181) | 5.4 | 5,319.3 (280.0) | 6.3 |
| 전북 | 10 | 4.6 | 2,796 (280) | 4.4 | 3,422.2 (342.2) | 4.0 |
| 제주 | 2 | 0.9 | 627 (314) | 1.0 | 884.7 (442.4) | 1.0 |
| 전체 | 216 | 100.0 | 63,455 (294) | 100.0 | 84,786.0 (392.5) | 100.0 |
| 수도권 | 84 | 38.9 | 30,129 (359) | 47.5 | 39,876.4 (474.7) | 47.0 |
| 비수도권 | 132 | 61.1 | 33,326 (252) | 52.5 | 44,909.6 (340.2) | 53.0 |

| 순위 | 학교 | 수혜건수 | 금액(억원) | 지역 | 설립 |
|----|-------------|-------|---------|----|-------|
| 1 | 서울대학교 | 4,049 | 5,991.6 | 서울 | 국립대법인 |
| 2 | 연세대학교 | 2,733 | 4,218.4 | 서울 | 사립 |
| 3 | 고려대학교 | 2,452 | 3,547.0 | 서울 | 사립 |
| 4 | 성균관대학교 | 2,006 | 3,043.1 | 서울 | 사립 |
| 5 | 한국과학기술원 | 1,397 | 2,660.5 | | 특별법인인 |
| 6 | 부산대학교 | 1,970 | 2,295.8 | | 국립 |
| 7 | 경북대학교 | 1,993 | 2,293.9 | | 국립 |
| 8 | 한양대학교 | 1,524 | 2,167.5 | 서울 | 사립 |
| 9 | 전남대학교 | 1,276 | 1,949.0 | | 국립 |
| 10 | 전북대학교 | 1,545 | 1,805.4 | | 국립 |
| 11 | 포항공과대학교 | 933 | 1,701.7 | | 사립 |
| 12 | 경희대학교 | 1,427 | 1,630.3 | 서울 | 사립 |
| 13 | 충북대학교 | 915 | 1,565.8 | | 국립 |
| 14 | 충남대학교 | 1,496 | 1,552.9 | | 국립 |
| 15 | 부경대학교 | 781 | 1,363.7 | | 국립 |
| 16 | 인하대학교 | 1,014 | 1,303.0 | 인천 | 사립 |
| 17 | 이화여자대학교 | 1,028 | 1,164.2 | 서울 | 사립 |
| 18 | 강원대학교 | 1,000 | 1,135.1 | | 국립 |
| 19 | 울산과학기술원 | 723 | 1,133.1 | | 특별법인인 |
| 20 | 아주대학교 | 853 | 1,131.1 | 경기 | 사립 |
| 21 | 중앙대학교 | 794 | 1,048.7 | 서울 | 사립 |
| 22 | 경상국립대학교 | 907 | 1,026.1 | | 국립 |
| 23 | 한국기술교육대학 | 28 | 945.6 | | 사립 |
| 24 | 한양대학교_ERICA | 640 | 909.3 | 경기 | 사립 |
| 25 | 건국대학교 | 753 | 909.0 | 서울 | 사립 |
| 26 | 제주대학교 | 612 | 871.2 | | 국립 |
| 27 | 광주과학기술원 | 426 | 857.8 | | 특별법인인 |
| 28 | 울산대학교 | 659 | 829.9 | | 사립 |
| 29 | 동국대학교 | 651 | 810.6 | 서울 | 사립 |
| 30 | 가천대학교 | 676 | 790.9 | 경기 | 사립 |

자료: 대학알리미
주: 사업 및 지원금액의 ()수치는 1개 대학당 평균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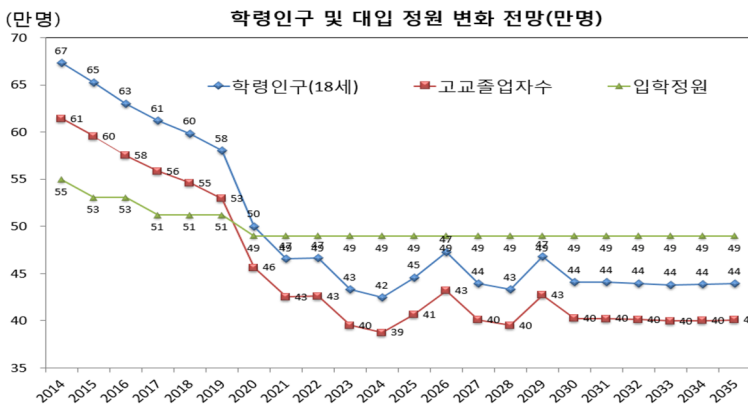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21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상과 요인

대학의 위기와 지방도시의 문제

- 저출산에 따른 대학의 위기(대학의 위축은 지역쇠퇴 초래)
 - 2013~2018 대학구조 조정을 통한 입학정원은 전국 약 5.9만(11%)감축(서울소재 대학은 1%감축) → 3주기 평가 후 감축은?(2022년까지 약 11만 이상 감축이 불가피)



시도별 대학입학정원 감축인원

| | 2013 정원 | 2018 정원 | 감축인원 | 감축 비율 |
|------|-------------------|-------------------|---------|-------|
| 강원 | 23,971 | 21,240 | -2,731 | -11.4 |
| 경기 | 96,256 | 86,010 | -10,246 | -10.6 |
| 경남 | 26,149 | 22,256 | -3,893 | -14.9 |
| 경북 | 43,882 | 36,518 | -7,364 | -16.8 |
| 광주 | 22,524 | 20,128 | -2,396 | -10.6 |
| 대구 | 24,895 | 22,364 | -2,531 | -10.2 |
| 대전 | 27,940 | 25,465 | -2,475 | -8.9 |
| 부산 | 46,929 | 40,792 | -6,137 | -13.1 |
| 서울 | 92,995 | 91,847 | -1,148 | -1.2 |
| 세종 | 1,437 | 1,204 | -233 | -16.2 |
| 울산 | 5,485 | 5,105 | -380 | -6.9 |
| 인천 | 12,930 | 12,010 | -920 | -7.1 |
| 전남 | 18,054 | 15,093 | -2,961 | -16.4 |
| 전북 | 26,047 | 21,318 | -4,729 | -18.2 |
| 제주 | 6,053 | 5,354 | -699 | -11.5 |
| 충남 | 37,910 | 31,577 | -6,333 | -16.7 |
| 충북 | 24,696 | 21,234 | -3,462 | -14.0 |
| 전국 | 538,153 | 479,515 | -58,638 | -10.9 |
| 수도권 | 202,181 (37.6) | 189,867 (39.6) | -12,314 | -6.1 |
| 비수도권 | 335,972 | 289,648 | -46,324 | -13.8 |

자료 : 대학신문(2018.10.17.) 내용으로 필자 수정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22

2.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상과 요인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과 대책

- **국가산업구조의 변화와 혁신생태계(일자리 발생)의 집중: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 및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
 - 농업사회 → 산업사회 → 정보·서비스사회로 변화
 - 수도권 지역의 양호한 일자리(100대 기업 83% 집중:서울 75, 경기 9, 인천 4)의 집중 및 발생
- **인적 자원의 서울집중적 구조: 지역에도 고급 인력들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
 - 단체장(교육감 포함)을 제외한 지방행정수장의 중앙 파견
 - 고등교육기관의 서울집중 및 지원(교육회계 변화로 재정지원사업비독점, 성적우수 고교졸업생들의 서울대학이 독점)
- **불균형을 조장한 효율성 위주의 국토계획/정책: 형평성을 고려한 인프라공급**
 - 제1차 국토계획 이후 국토정책은 국토의 역Y축 중심의 인프라개발에 주력(서울 중심의 인프라공급)
 - 효율성 위주의 국토계획, 대중요법적 정책(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 평가, 수도권 신도시)
- **기타 요인**
 - '사람은 나면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라는 서울중심의 의식구조
 - 지방자치 행정의 차별(명칭: 특별시/광역시/일반시/군, 서울시장 국무회의 배석)
 - 지방은행의 붕괴(2018년 현재 수도권은 예금액 70.2%, 대출액, 65.2%)
 - 중앙부처의 엇박자, 집행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가균형발전
 - 지역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의 격차 심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안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안

출생자, 사망자에 따른 인구변화 예측

| 연도 | 추계인구 | 출생자수 | 사망자수 | 자연증가 |
|------|---------|------|------|-------|
| 2015 | 5,101.5 | 43.8 | 27.6 | 16.3 |
| 2016 | 5,124.6 | 40.6 | 28.1 | 12.5 |
| 2017 | 5,144.6 | 35.8 | 28.6 | 7.2 |
| 2018 | 5,163.5 | 32.7 | 29.9 | 2.8 |
| 2019 | 5,170.9 | 30.3 | 29.5 | 0.8 |
| 2020 | 5,167.6 | 27.2 | 30.5 | -3.3 |
| 2021 | 5,163.8 | 27.5 | 31.0 | -3.5 |
| 2022 | 5,158.8 | 27.0 | 31.6 | -4.6 |
| 2023 | 5,152.4 | 26.4 | 32.1 | -5.7 |
| 2024 | 5,144.7 | 25.9 | 32.7 | -6.8 |
| 2025 | 5,136.0 | 25.5 | 33.2 | -7.8 |
| 2026 | 5,126.4 | 25.1 | 33.9 | -8.8 |
| 2027 | 5,115.8 | 24.7 | 34.5 | -9.8 |
| 2028 | 5,104.3 | 24.4 | 35.3 | -10.9 |
| 2029 | 5,091.6 | 23.9 | 36.1 | -12.2 |
| 2030 | 5,077.7 | 23.4 | 37.0 | -13.6 |
| 2031 | 5,062.5 | 22.9 | 37.9 | -15.1 |
| 2032 | 5,045.8 | 22.3 | 38.9 | -16.6 |
| 2033 | 5,027.7 | 21.8 | 39.9 | -18.1 |
| 2034 | 5,008.1 | 21.4 | 41.0 | -19.6 |
| 2035 | 4,987.0 | 21.0 | 42.1 | -21.1 |

| 연도 | 추계인구 | 출생자수 | 사망자수 | 자연증가 |
|------|---------|------|------|-------|
| 2036 | 4,964.6 | 20.6 | 43.0 | -22.4 |
| 2037 | 4,941.0 | 20.2 | 44.0 | -23.8 |
| 2038 | 4,916.0 | 19.8 | 45.0 | -25.2 |
| 2039 | 4,889.5 | 19.4 | 46.1 | -26.7 |
| 2040 | 4,861.4 | 19.0 | 47.3 | -28.3 |
| 2041 | 4,831.5 | 18.5 | 48.5 | -30.1 |
| 2042 | 4,799.6 | 18.0 | 49.8 | -31.9 |
| 2043 | 4,765.7 | 17.5 | 51.1 | -33.7 |
| 2044 | 4,729.9 | 17.0 | 52.5 | -35.5 |
| 2045 | 4,692.1 | 16.4 | 53.8 | -37.3 |
| 2046 | 4,652.4 | 15.9 | 55.1 | -39.2 |
| 2047 | 4,610.6 | 15.4 | 56.4 | -40.9 |
| 2048 | 4,567.1 | 15.0 | 57.6 | -42.6 |
| 2049 | 4,521.6 | 14.5 | 58.8 | -44.3 |
| 2050 | 4,474.4 | 14.1 | 60.1 | -46.0 |
| 2051 | 4,425.4 | 13.7 | 61.3 | -47.6 |
| 2052 | 4,374.8 | 13.3 | 62.5 | -49.1 |
| 2053 | 4,322.6 | 13.0 | 63.6 | -50.6 |
| 2054 | 4,268.8 | 12.7 | 64.8 | -52.1 |
| 2055 | 4,213.5 | 12.4 | 65.9 | -53.5 |

| 연도 | 추계인구 | 출생자수 | 사망자수 | 자연증가 |
|------|---------|------|------|-------|
| 2056 | 4,156.6 | 12.1 | 67.0 | -54.9 |
| 2057 | 4,098.1 | 11.8 | 68.1 | -56.3 |
| 2058 | 4,038.2 | 11.5 | 69.1 | -57.7 |
| 2059 | 3,976.7 | 11.1 | 70.1 | -59.0 |
| 2060 | 3,913.7 | 10.8 | 71.1 | -60.3 |
| 2061 | 3,849.3 | 10.4 | 72.1 | -61.6 |
| 2062 | 3,783.4 | 10.1 | 73.0 | -63.0 |
| 2063 | 3,716.2 | 9.7 | 74.0 | -64.2 |
| 2064 | 3,647.6 | 9.4 | 74.9 | -65.5 |
| 2065 | 3,577.6 | 9.1 | 75.8 | -66.8 |
| 2066 | 3,506.3 | 8.8 | 76.7 | -68.0 |
| 2067 | 3,433.8 | 8.5 | 77.6 | -6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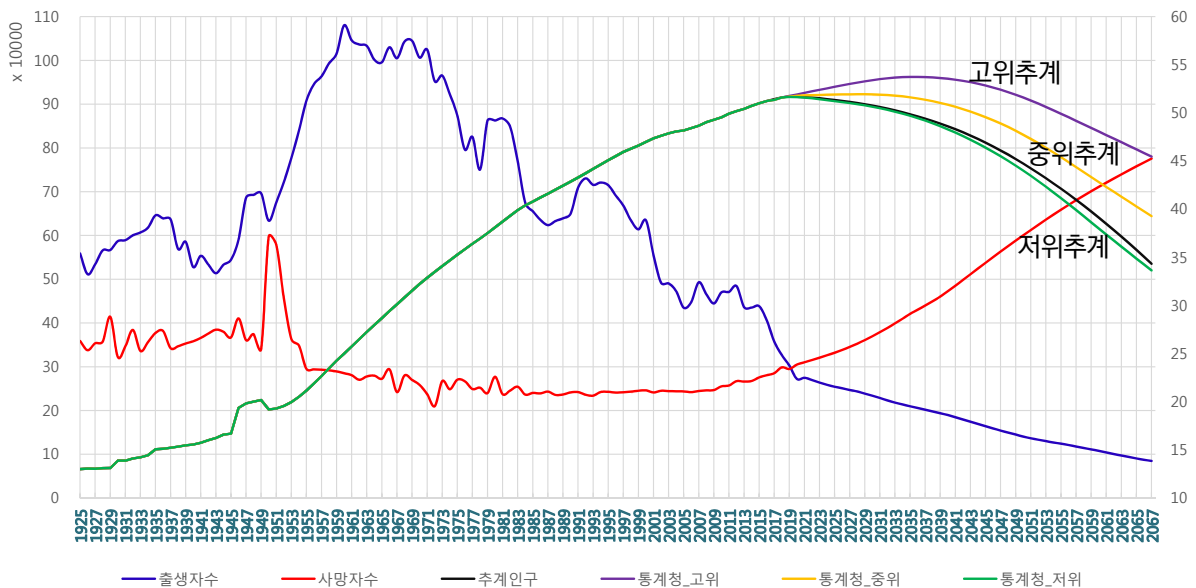
인구추계조건: 출산율: 0.90, 평균수명: 83세, 출생성비: 105

자료: 통계청 추계인구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안

우리나라 장래 인구추계

우리나라 출생자, 사망자추이 및 추계인구



인구추계조건: 출산율: 0.90, 평균수명: 83세, 출생성비: 105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안

수도권 · 비수도권 불균형

-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향후 저위 추계일수록 수도권 집중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됨(시군별 인구추계는 2000-2015년 사이 전국 인구 중 비중으로 추계)

| 구분 | | 1960 | 1970 | 1980 | 1990 | 2000 | 2010 | 2015 | 2020 | 2030 | 2040 | 2050 | |
|-------------------------|----------------------------|--------|-----------------|-----------------|------------------|------------------|------------------|------------------|------------------|------------------|------------------|------------------|------------------|
| 행정구역 (km ²) | 전국 | 98,567 | 98,623 | 98,623 | 99,261 | 99,372 | 100,033 | 100,300 | 100,378 | 100,378 | 100,378 | 100,378 | |
| | 수도권 | 11,519 | 11,553 | 11,556 | 11,633 | 11,640 | 11,801 | 11,830 | 11,856 | 11,856 | 11,856 | 11,856 | |
| 인구 (천인) | 전국 | 추계 | 24,989 | 31,466 | 37,436 | 43,411 | 46,136 | 48,580 | 51,069 | 51,676 | 50,777 | 48,614 | 44,744 |
| | | 중위 | | | | | | | | 51,781 | 51,927 | 50,855 | 48,911 |
| | | 저위 | | | | | | | | 51,644 | 50,654 | 48,307 | 45,507 |
| | 수도권 | 추계인구 | 5,194 (20.8) | 8,791 (27.9) | 13,298 (35.5) | 18,587 (42.8) | 21,354 (46.3) | 23,836 (49.1) | 25,274 (49.5) | 25,937 (50.2) | 26,248 (51.7) | 26,174 (53.8) | 25,233 (56.4) |
| | | 중위추계 | | | | | | | | 25,958 (50.1) | 26,480 (51.0) | 26,150 (51.4) | 25,254 (51.6) |
| | | 저위추계 | | | | | | | | 25,913 (50.2) | 26,491 (52.3) | 26,126 (54.1) | 25,335 (55.7) |
| | 비수도권 | 추계 | 19,795 | 22,675 | 24,138 | 24,824 | 24,782 | 24,744 | 25,795 | 25,739 | 24,509 | 22,440 | 19,521 |
| | | 중위 | | | | | | | | 25,823 | 25,447 | 24,705 | 23,656 |
| | | 저위 | | | | | | | | 25,731 | 24,163 | 22,181 | 20,172 |
| | 인구 밀도 (인/km ²) | 전국 | 253.5 | 319.1 | 379.6 | 437.3 | 464.3 | 485.6 | 509.2 | 514.8 | 505.9 | 484.3 | 445.8 |
| 수도권 | | 450.1 | 760.9 | 1,150.8 | 1,597.8 | 1,834.6 | 2,019.8 | 2,136.4 | 2,187.7 | 2,224.1 | 2,190.9 | 2,063.1 | |
| 비수도권 | | 227.4 | 260.4 | 277.2 | 283.3 | 282.5 | 280.4 | 291.6 | 290.8 | 275.7 | 255.7 | 229.1 | |

주: 2050 중위 및 저위 추계인구 중 2050의 인구는 2047년의 자료임(통계청 인구추계는 2047까지 시도별로 추계되어 있음)
 자료: 인구: 인구주택센서스 각년도 및 통계청 인구추계
 행정구역면적의 1960-2000은 권일(2007, 12)을 재인용, 2005-2018 행정구역면적: 각 연도 지방행정구역 요람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안

역대정부 국토 · 도시정책 평가

- 역대 정부의 수도권 정책 및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의 차가 컸으며, 정책의 일관성 없어 대내외 여건변동에 따라 정책이 수시로 변함
-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과 목표의 부재
 - 필요성 부재: 국토균형발전은 필요한가?(합의의 부재)
 - 구체적이고 조작적인 목표의 부재: ① 측정대상 불명확(인구, 소득, 기업) ② 국토균형의 측정 단위지역 ③ 평가지표 및 목표수준 불명확(수도권 인구집중도, 종주화 지수, 지니계수 등)
-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목표와 수단간의 불일치
 - 예) 2차 국토계획의 목표: 국토균형발전, 수단: 1차 계획의 거점개발
 -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은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
 -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하지만 in서울대학 중심으로 재정지원
- 국토불균형의 원인에 대한 진단 부재
 - 지금의 국토불균형을 만들어 낸 요인은?
 -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불균형을 조장한 국토계획, 도와 광역시 분리, 행정구역명칭 등
-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기구가 없어 여러 부처에서 단편적·분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효과가 낮음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안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안

-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 필요**
 - 국토균형발전은 어느 한 분야의 정책수단만으로는 바로 잡기 어려움
 -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전반의 정책전환과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 →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국민공감대 제고
- **무엇보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에 사람이 살고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
 -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도권 지역 기업의 비수도권으로의 이전과 지역에서 활발한 창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이 필요
- **지역대학의 육성을 통한 인재의 육성과 유출의 예방**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방대학 육성방안 마련 :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방 대학(또는 인근)으로 이전하여 지방 대학의 특성화와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특성화된 인재 육성(현재 재정지원사업비 집행이 서울소재 대학이 독식하는 구조)(KAIST, 포스텍, 지방대 의대, 혁신도시관련학과 등에서 해법 참고)
 -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내 행정의 수장이 되어 지역발전을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 정립 → 우수한 인재의 유출방지
 - 혁신도시 공기업에 지역대학 출신자에게만 주는 인센티브를 지역 출신 중·고교로 확대 → 상급학교 대학진학을 위해 떠났던 인재의 회귀를 유도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안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안

-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 선행조건 : 광역행정구역의 통합, 국회의 양원제 개편
 - 광역행정구역 통합 : 도와 광역시를 통합하여 9개 권역 혹은 6개 권역으로 통합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 기능(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함)을 지방으로 이양
 - 상원(?) : 분권화된 지역을 대표하는 의회로 광역지자체에 같은 수의 의원을 배정하고 균형발전·지방분권 등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인구로 배분되는 현 국회의원 의석제도로는 수도권 의원이 지속 증가되어 한계)을 이양
 - 현재 불균형으로 인한 성장기반 격차의 완화가 필요 → 과도적으로 저개발지역이 기개발 지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획의 제공(사회간접자본투자, 서비스인프라, 개발기금 등)이 필요

지역구 국회의원수 예측

| 비교 | 전국 | 수도권 | 비수도권 |
|-----------|--------------|---------------|---------------|
| 19대(2012) | 246 (100) | 112 (45.5) | 134 (54.5) |
| 20대(2016) | 253 (100) | 121 (47.8) | 131 (51.8) |
| 21대(2020) | 253 (100) | 121 (47.8) | 132 (52.2) |
| 22대(2024) | 253 (100) | 124 (49.0) | 129 (51.0) |
| 23대(2028) | 253 (100) | 127 (50.2) | 126 (49.8) |
| 24대(2032) | 253 (100) | 128 (50.6) | 125 (49.4) |
| 25대(2036) | 253 (100) | 129 (51.0) | 124 (49.0) |

- **자치단체에 대한 명칭의 통일**
 - 특별시와 광역시라는 명칭에서 특별(특별시에 대한 특혜 폐지) 및 광역 삭제
 - 시군을 통일된 명칭으로 개편 : 도시와 농촌이 각각 다른 행정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시와 군을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고 행정서비스를 차별화하면 됨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안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안

- **‘시·도통합지역발전권’**
 - 광역시 폐지 및 시도간 통합을 통한 경쟁력강화
 - 과도적으로 광역시·도를 통합하여 전국 9개 권역의 ‘시·도통합지역발전권’으로 설정
 -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를 강화하며, 하위의 도시 및 도시권 단위의 주민생활서비스와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한 체계적 방안 모색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vs. 국토수석 vs. 국무총리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vs. 국토수석 vs. 국무총리실 : 국토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토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지방자치, 지방분권 포함)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로서 더 바람직한 조직은 ?
- **국회내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설치**
 -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지방자치에 대한 법률을 심의하는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설치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안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안

-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
 - 지방의 고위 공무원은 중앙에서 파견하는 시스템 개선 → 지역에서 성장한 유능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
- **국토계획에서 균형발전 목표의 강화 및 실천력 강화**
 - 국토의 균형발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수단의 계획수립과 집행
 - 수도권 이전기관들의 이전 시 기존 도시에 이전하는 것이 필요(혁신도시, 기업도시에 대한 반성)
- **예타제도의 개선을 통한 중소도시의 육성**
 - 현재 예타제도는 경제성에 치우쳐 있어 국토의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음
 - SOC는 인구와 산업 유치의 기본 요소임. 다소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지방도시간 연결과 청년들의 문화와 편의제공을 위한 SOC확충과 중소도시 육성이 필요(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버스 혹은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인구 10~20만 규모의 중소도시 중심지에 도달 가능)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공모제도의 개선(일부 일반회계로 전환)**
 - 현재의 공모방식은 중앙정부가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지방정부의 줄서기를 유인하는 방식이며, 재정이 열악한 낙후지역일수록 선정가능성이 낮음 → 국고보조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합리적 이익 방안 모색이 필요

감사합니다.